데스크 칼럼

남방한계선과 무항산무항심

이성오
서울취재본부장

'남방한계선'이란 식물의 생존이 가능한 위도상의 남쪽 한계선, 또는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남쪽 경계선을 이르는 말이다. 최근에는 산업체나 취업준비생들이 수도권에서 멀수록 내려가길 꺼린다는 비유로 인용된다. 지난 6월 발표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번 투자로 '반도체 남방한계선'이 붕괴됐다"고 밝혔지만, 일부 매체들은 '아직 충청권도 안착하기 전인데 광주까지 남하할 수 있겠느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KTX로 2시간이 걸린다', '5성급 호텔이 없다', '국제학교는 광주국제외국인학교 뿐', '숙련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광주전남북 반도체 전공 학부생들로는 부족하다', '인근에 직·주·락(職住樂)이 부족하다' 등을 이유로 든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용인 팹 10기와 광주 팹 4기가 구축될 경우 숙련 인력 8만5000명 이상이 필요하다. 특히 광주 팹의 경우 전남·전북 지역의 현재 반도체 전공 학부생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제약조건이나 걸림돌은 따지고 보면 조금만 힘써도 해결될 사안들이다. 특히 인력 부족의 경우 30년 전 광주에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지은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앰코) 사례에서 보면 풀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삼성전자에서 12년간 일한 바 있는 이준기 전남대 광주·전남반도체공동연구소 소장은 "인원은 충분하다. 문제는 규모보다 인력의 질이다. 이를 높이기 위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반박했다. 이를 위해 전남대, GIST,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등 호남 지역 대학들은 반도체 관련 학과 신설과 정원 확대, 기업과의 산학 협력을 하기로 했다.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AI, 반도체, 에너지 등 지역 전략산업 분야 인재 10만명을 양성한다는 목표다. 그동안 반도체 인력이 타지로 유출된 것은 지역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다. 매년 유출되는 인재만 붙잡아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남방한계선은 그 근거도 박약한, 지역차별의 의도가 담긴 심리적 용어일 뿐이다.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다보니 이런 비경제적이고, 비논리적인 말이 버젓이 쓰이고 있다. 이병훈 전 의원은 지난 1월 반도체 기업 호남유치론을 주장하며 "반도체 남방 한계선 주장은 산업 현실이 아니라 구조적 지역차별을 고착화하는 것"이라며 "미국에서 설계하고 대만에서 제조, 말레이시아에서 패키징하는 반도체 생태계를 볼 때 남방한계선을 거론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우리나라가 경제개발과정에서 수도권과 영남에 집중 투자하면서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외가 발생한 것을 설명하면서 "얼마나 서럽고, 외롭고, 슬펐겠느냐"고 호남을 위로했다. 그러면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언급하며 "완전히 균형을 맞출 수는 없겠지만 소외와 배제, 슬픔과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동서가 또는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 성장하는 첫 출발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호남은 나라의 위기마다 앞장서 나라를 지켰고, 온 몸을 바쳐 민주주의를 수호해 왔다. 약무호남시무국가, 민주화의 성지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다. 그러나 소외와 불균형이 장기화된 탓에 타지역인들로부터 차별을 받고 멸시를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미디어오늘이 법원 사법정보 공개포털을 통해 최근 5년 형사 사건 중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등 지역명이 들어간 판결문 533건을 조사한 결과 호남 지역비하 문제는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최근 5년 형사 판결문에서 '전라도'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사건은 306건이며, 이 중 80건(26.14%)이 호남 지역혐오 관련 사건이었다. 반면 '경상도' 지역혐오 관련 사건은 17건으로 전체의 12.59%에, '충청도' 지역혐오 사건은 3건으로 3.26%에 그쳤다.

무항산무항심(無恒産無恒心). 맹자가 제나라 선왕이 정치에 대해 묻자 "백성들이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지내면, 왕도(王道)의 길은 자연히 열리게 된다"며 한 말이다. 국민의 생활안정이 정치의 근본이라는 얘기다. 잘 살아야 한다.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는다. 경제개발면에서 영남에 크게 뒤지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타지보다 적다. 인구유출이 심해 인구수는 영남의 겨우 30%를 웃도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호남의 경제력이 약한 이유를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알지 못한다. 호남이 차별 받았다고 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되묻는다. 통탄할 일이다.

그래서 천재일우의 기회다. 호남의 힘으로 당선시킨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도 못한 경제적 소외 탈출 기회를 이 대통령이 열어주었다. 꼭 기회를 살려내 그 고마움에 보답하고, 이 설움을 다시는 후손들에게 대물림하지 않아야 한다.

기고

물이 있어야 물고기가 모인다

김경한
이야기브릿지 대표
광주시 청년위원회 위원장

지역에서 청년이자 문화기획자로 활동한 지 어느덧 10년이 됐다. 누군가 기획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 없이 인프라라고 답한다. 인적 인프라가 튼튼해야 많은 예술인과 관련 업체의 생존을 견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가장 힘든 점을 묻는다면 사람이 없다는 현실을 꼽는다. 인구 140만의 광역시에서 사람이 없다는 말이 언뜻 모순처럼 들리겠지만, 현장의 실상은 다르다.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열악한 생태계를 견디지 못하고 지역을 떠나며, 기획 현장에 함께 일할 청년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은 2년 전쯤 시작됐다. 문화예술 지원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칭하던 어느 정치인과의 대담,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기후위기나 약자 소외 문제로만 접근하던 선배들과의 대화를 거치며 청년 문화예술인의 위태로운 입지를 뼈저리게 실감했다.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논하려면 결국 다음 세대가 살아남는 것이 최우선 아닙니까?" 항변하듯 뱉어낸 이 한마디는 나 스스로 청년 예술인들의 자립 생태계 구축을 화두로 삼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다.

오늘날 청년 예술인들은 소액의 지원사업이라도 따내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내밀고 심사대 앞에 선다. 대단한 부나 거창한 기회를 얻기 위함이 아니다. 그저 올 한 해, 단 한두 번의 무대라도 서기 위해 영세한 지원사업에 자신의 열정을 헐값에 넘길 수밖에 없다.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기는커녕, '무료'라는 꼬리표가 붙어 쉽게 예약하고 쉽게 취소(노쇼)해 버리는 소모성 콘텐츠로 전락하는 것이 지역 문화예술의 현주소다.

과거의 잣대로는 '예술가는 본래 배고픈 직업이며, 기회는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라 질책할지도 모른다. 나 역시 기획서 한 장을 들고 기업과 대학, 관공서를 전전하며 숱한 거절을 밥 먹듯 겪었다. 하지만 시대와 정서가 변했다. 지금의 청년들에게 배를 곯아가며 예술을 하라는 것이 과연 온당한 조언인가. 청년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공론장조차 턱없이 부족하고, 기회가 단절되니 문제를 의제화하는 동력마저 희미해진다. '스스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는 핀잔에는 '우리가 만들면 기성세대가 관심이나 가져주는가'라고 되묻고 싶다. 청년들이 모여 고충을 토로하는 자리에 귀 기울이려 찾아오는 어른을 나는 거의 보지 못했다.

예산의 불균형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17개 시·도별 전체 예산 대비 문화예술 예산 비중을 보면 광주가 1위, 전남이 16위다. 전남의 열악함은 객관적 수치로 드러나지만, 광주의 '1위'라는 타이틀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포함된 통계적 함정이 숨어 있다. 지역 시민단체 포럼 자료에 따르면 청년 문화예술인에게 직접 닿는 체감 예산은 광주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문다는 뼈아픈 지적도 있었다.

분노와 비판을 넘어, 이제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그 첫 단추는 '제대로 된 거버넌스 구축'이다. 행정이 주도하고 민간이 종속되는 수직적 구조가 아니라, 상호 견제와 자율성이 보장되는 수평적 협의체가 절실하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지역 문화재단, 광주비엔날레라는 거대한 세 축에 맞서 대등하게 목소리를 내고 균형을 맞출 '독립적인 청년문화예술 거버넌스'가 의사결정의 무게추 역할을 해야 한다. 이곳에 청년 기획자들의 실질적 지분이 보장되고 정책과 전략이 수립될 때, 비로소 자립을 위한 환경 조성이 시작될 것이다.

정책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 일회성 현금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자신의 콘텐츠로 정당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를 짜야 한다. 시민들의 '공짜 문화' 인식을 개선할 문화예술 바우처제도 신설 등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실현될 수 있다. 발굴부터 교육, 사업화,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장기적이고 입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제조업 기반의 성장은 제한된 부지와 이해관계로 한계가 명확하지만, 문화콘텐츠가 창출할 부가가치와 성장 전망은 무한하다.

이 모든 변화의 동력은 건강하고 실질적인 거버넌스에서 나온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협의체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고 시범운영을 통해 함께 과정을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거버넌스여야 한다. 어떻게 하면 물고기가 바다로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알을 낳게 할 수 있을까. 어종을 다양화하고 터를 넓히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정작 '물'이 말라버렸다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물이 있으면 물고기는 자연스레 모여든다. 청년들이 고충을 나눌 소통 창구가 있고, 그 제안이 현장에 반영되는 효용감을 느끼며, 비로소 '이곳에서도 예술로 먹고살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을 때 탈(脫)지역 행렬은 멈출 것이다. 우리는 지금 당장, 그들이 마음껏 헤엄칠 생태계라는 '물'을 채워줘야 한다.

취재수첩

안전벨트가 생명을 지킨다

송태영
사회부 차장대우

여행을 떠날 때도, 주말 장을 보러 갈 때도 자동차는 이제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동수단이 됐다.

운전자가 차량 좌석에 앉으면 출발 전 자연스럽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바로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다. 하지만 뒷좌석에 앉는 순간 분위기는 달라진다. "뒷좌석은 안보이니까 안전벨트를 안 해도 되잖아"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통계는 이런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난해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이 90%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광주와 전남의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각각 25.2%, 28.4%에 불과했다. 시민 4명 가운데 3명 이상이 뒷좌석에서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셈이다.

'뒷좌석은 안전하다'는 잘못된 믿음이다. 교통사고는 앞좌석과 뒷좌석을 가리지 않는다. 오히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뒷좌석 승객은 충돌 순간 앞으로 튕겨 나가 자신의 생명은 물론 앞좌석 탑승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실험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을 때 중상을 입을 가능성은 착용했을 때보다 6배 이상 높았다. 몇 초면 끝나는 행동 하나가 생사를 가르는 차이를 만든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문화는 좀처럼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2018년부터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뒤는 단속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에 경찰은 단속을 강화하고 벌점 신설까지 추진하고 있다. 또 차량 전면을 촬영해 앞좌석 탑승자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무인단속 장비도 개발·도입할 계획이다. 제도와 단속도 필요하지만 안전벨트를 매는 이유는 과태료, 벌점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가족, 동승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점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른다. 사고는 확률이지만 안전벨트는 선택이 아니라 습관·의무다. 순간 방심으로 인해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출발하기 전 모든 탑승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때다.

사설

전국 최초 '섬 반값여행' 기대되는 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전국 최초로 '섬 반값여행'을 전격 시행한다.

2026 전남광주 섬 방문의 해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라는 대형 국제행사 등의 사전 인지도를 높이고 방문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이를 추진키로 한 것이다.

섬 반값여행은 해당 시·군·구 외 지역에 거주하는 관광객이 대상 섬들에서 사용한 운임, 숙박, 음식, 체험 등 여행경비의 50%, 최대 1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관광지원 사업을 말한다.

사업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이며 목포·여수·고흥·보성·강진·영광·진도·신안 등 8개 시·군 16개 섬에서 운영된다.

이 사업은 사전 신청–승인–사용–사후 정산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참여 희망 관광객이 여행 시작 최소 5일전 'JG TOUR' 앱 또는 누리집에서 거주지 확인용 신분증을 등록하고 사전신청을 한 뒤 승인을 받고 현지를 방문해 그 곳 지역화폐 앱을 이용해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된다. 또 관광객 편의와 소비 확산을 위해 섬에서 5만원 이상 소비하면 그 섬이 속한 육지 가맹점 사용액도 소비실적으로 인정된다. 이어 여행 종료 10일 이내에 앱을 통해 환급을 신청하면 증빙 심사를 거쳐 소비 금액의 50%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돌려 준다. 환급받은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 재방문이나 지역 온라인몰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전국 최초의 사업으로 상징성이 큰 이 사업은 단순 여행비 지원이 아닌 관광객이 섬에 머물며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 확산을 위해 설계돼 있는 점이 큰 특징이다.

즉, 여행비 지원으로 외지 관광객의 초기 방문 문턱을 낮춘데다 숙박·음식·체험 소비를 유도해 당일치기 방문보다 체류 시간이 긴 관광 패턴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환급분이 지역화폐 형태로 돌아가 재방문이나 지역 온라인몰 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통합특별시는 앞으로 섬 관광객 유치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2026 섬 방문의 해'와 연계한 공동 홍보, 남도 숙박할인, 1+1 투어 이벤트 등 다각적인 통합 마케팅을 펼치기로 했다.

섬 반값여행이 성공적으로 정착돼 섬 관광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개최를 앞 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

폭염 취약 소규모 사업장, 맞춤대책 절실

여름철 온열질환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복지공단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승인된 온열질환 산재는 총 195건에 사망자는 20명이다.

연도별 건수는 2022년 23건, 2023년 31건, 2024년 51건, 2025년 77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다. 올해 상반기 13건이 승인됐다.

전남광주도 이 기간 23건의 온열질환 산재가 승인됐다. 2022년 2건, 2023년 6건, 2024년 4건, 지난해 9건, 올해 2건 등이다.

특히 안전관리 인력과 시설을 충분히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과 고온에 직접 노출되는 실외 작업장 등에 피해가 집중됐다.

실제 전체 온열질환 산재중 50인 미만 사업장(5인 미만 42건, 5인 이상 30인 미만 43건, 30인 이상 50인 미만 17건)이 102건으로 전체의 52.3%를 차지했다. 또 전체 사망자(20명)중 30인 미만 사업장(5인 이상 30인 미만 10명, 5인 미만 5명)이 15명으로 75%나 됐다.

여기에 산재의 42.1%가 건설업(82건)에 집중됐고 전체 사망자중 95%(19명)가 실외 작업장에서 일하다 변을 당했다.

문제는 영세사업장이 일상화된 폭염에 가장 취약한 곳이 됐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는 데 있다.

이들은 냉방이 가능한 별도 휴게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다 설령, 이를 마련해도 냉방설비 설치와 전기요금 등 운영비가 부담이다.

또 폭염특보와 체감온도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할 안전·보건업무 전담 인력은 고사하고 고온 시간대 작업량을 줄이기 위한 대체인력 확보 또한 쉽지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사업장에 휴게시설과 이동식 냉방장비 설치비 지원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사업장별 안전관리 여건 점검, 근로자 건강관리, 응급조치 방법 등을 지원하는 순회형 안전관리 체계 또한 확대해야 한다.

폭염 점검도 대형 건설현장 중심이 아닌 소규모 제조·건설·운수 사업장과 실외 작업장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촘촘한 맞춤형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정치부	370-7040	논설실	370-7200
산업경제부	370-7020	임원실	370-7000
사회부	370-7030	총무국	370-7093
문화체육부	370-7234	사업국	370-7090
편집부	370-7082	광고국	370-7070
사진부	370-705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02)978-709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드림투데이와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자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드림투데이(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